

▣ 10가지 알아둘 점: 기후변화와 개발제원 (2015.7월)

출처 = <http://www.odi.org/sites/odi.org.uk/files/odi-assets/publications-opinion-files/9719.pdf>

1. 기후변화 대응은 더 나은 개발경로로 가는 길

개도국은 기후변화의 주범은 아니지만, 오늘날 세계 20개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의 절반을 차지한다. 만약 2050년까지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지만 개도국들이 현재와 같이 탄소배출을 한다면, 지구 기온 상승은 2도씨를 초과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재앙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를 피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저탄소 기후회복력 있는 경제 발전 경로는 꼭 저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빈곤과 오염감소, 더 나은 에너지 및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는 개발 진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발전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



2. 교통 부분 5조 달러 지출은 에너지 효율 향상, 보건 혜택 제공으로 이어져

정부와 기업들은 개도국의 향상된 신규 도로, 공항, 철로를 위해 7,700억 달러를 향후 15년에 걸쳐 투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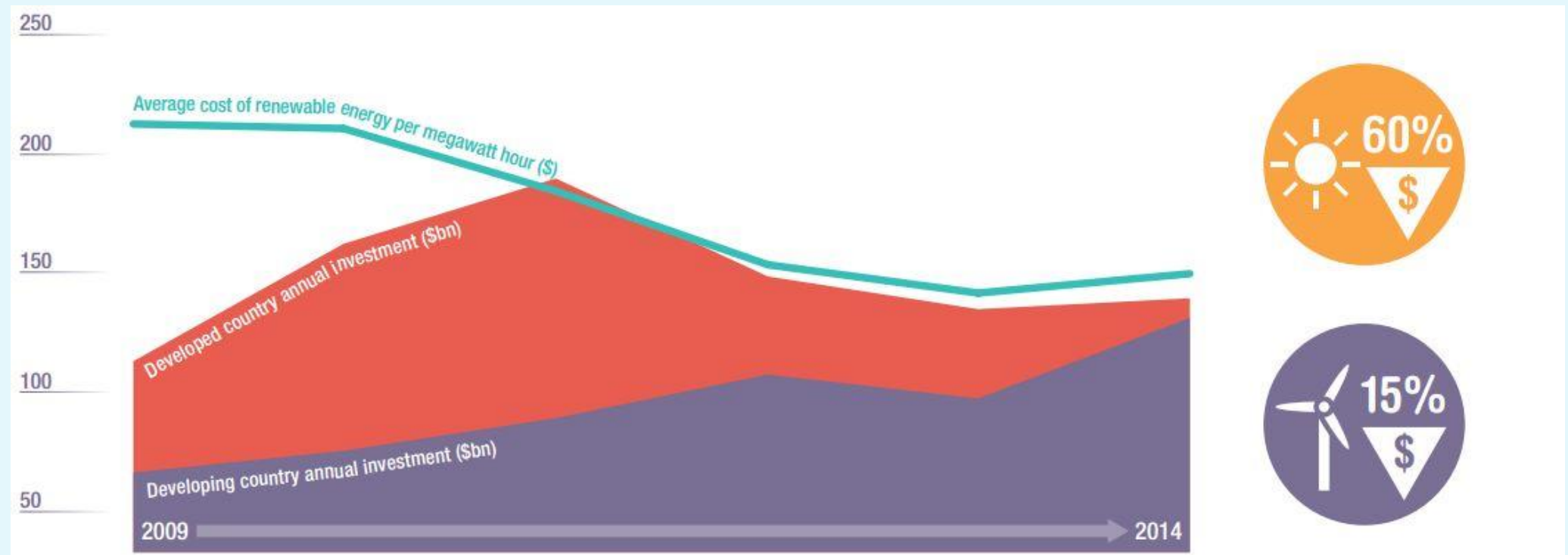
기존의 기술을 이용하면 에너지 수요는 70% 증가하지만, 새로운 접근법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보건과 효율성 면에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메트로버스 전용 차로는 보건으로 300만 달러, 시간 절감으로 130만 달러가 절약되고 있다.



3. 개도국의 투자 증가로 청정 에너지 원가 빠르게 하락 중

청정에너지 원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2009년 이래로 태양에너지 원가는 60%, 풍력은 15% 하락. 개도국이 시장리더로 등장하면서 청정에너지 공공민간투자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개도국 청정에너지 투자액은 전년대비 40% 상승한 1,310억 달러였다

인도 주들은 태양에너지를 글로벌 평균의 절반 이하로 조달하는 등 개도국의 원가 하락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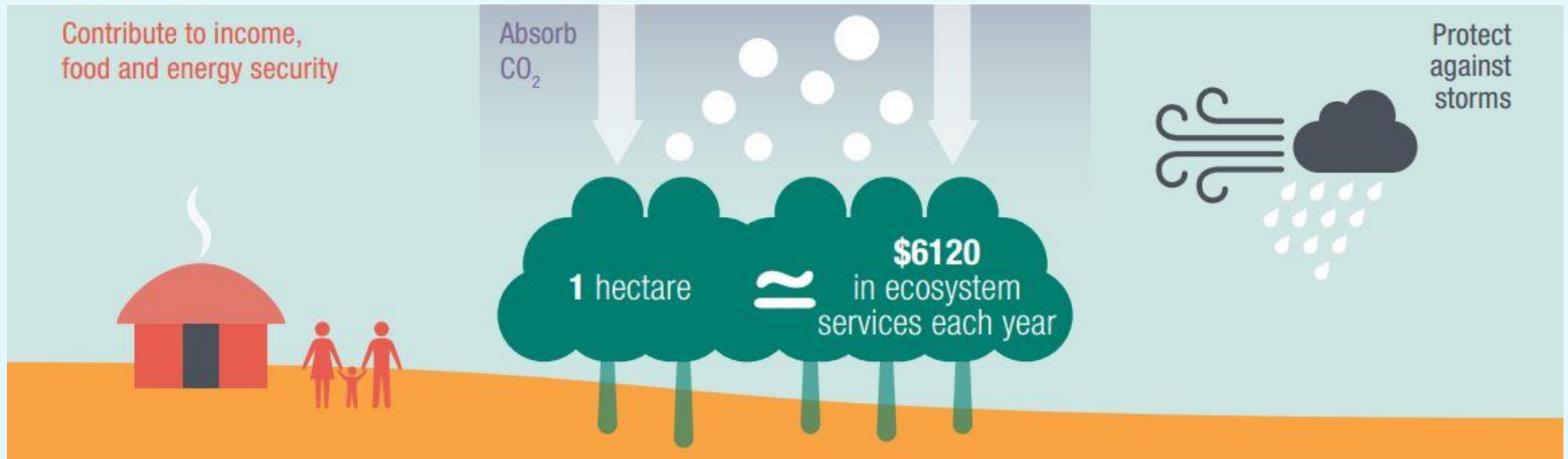


4. 산림보호는 생계 보호이자 기후변화 대응

산림은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보건, 식량 및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 매년, 7백만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지고 있으며, 1 헥타르 당 최대 6,120 달러의 생태계 서비스가 타격을 입고 있는 셈이다.

산림은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데, 폭풍 사이클론 해수면 상승에 대한 제1의 방어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산림 파괴를 일으키는 주요 산업에 대한 보조금 개혁은 브라질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서 산림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매년 야자수 오일, 콩, 육우 농가에 약 410억 달러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5. 기후 회복력 있는 농업 투자는 기아 퇴치에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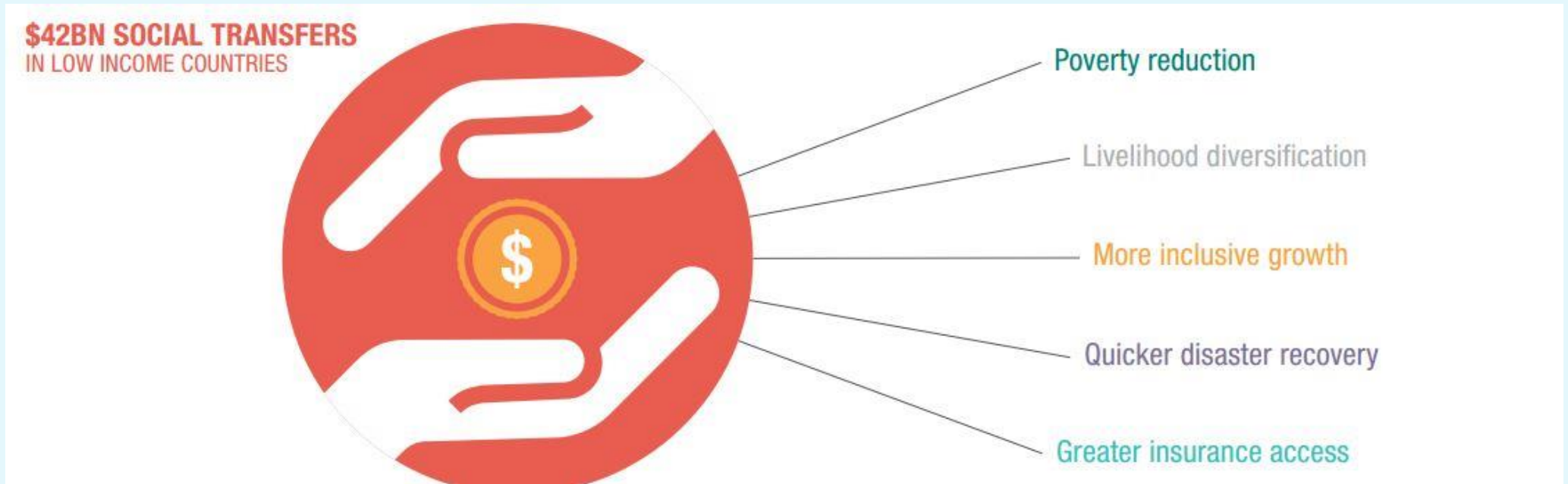
1990년 이래 빈곤율은 17% 하락했지만, 오늘날에도 8억4천2백만명이 여전히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준의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치들과 함께 농업 생산도 크게 향상될 필요가 있다. 지구 온도가 2도 미만 올라가더라도 2050년 사하라사막 이남과 남아시아에서 3-4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발육 부진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농업 연구와 인프라, 농촌 개발(2015-2030년 개도국 연간 투자 약 4,800억 달러)에 대한 투자는 농업 생산에서부터 가공, 운송, 저장, 거래 등의 공급망에 차질을 가질 수 있는 기후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데에 반드시 쓰여야 한다.



6.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출은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저소득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간 420억 달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지만,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적절한 지출은 저소득 층의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계 다각화, 경제적 충격에 대한 보호, 포용적 성장 증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후 대응 사회 보호 시스템은 기후 관련 재난으로부터 회복을 도울 수 있으며, 보험 정책 통합은 각 가정이 극한 기상현상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움이 도리 수 있다.



7. 이미 기후재난으로 연간 1,000억 달러 손실, 기후변화는 이를 더 악화

기후변화로 일부 지역에서는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점점 더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피해는 주로 개도국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들이 주로 피해를 입으며, 재해로 빈곤 탈출이 늦어지고 국가 부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재해로 인한 국제적 재정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재정은 조기경보 시스템, 연안 인프라,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미래의 기후관련 재난 리스크를 경감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시한다.



8. 기후행동에 투자하는 개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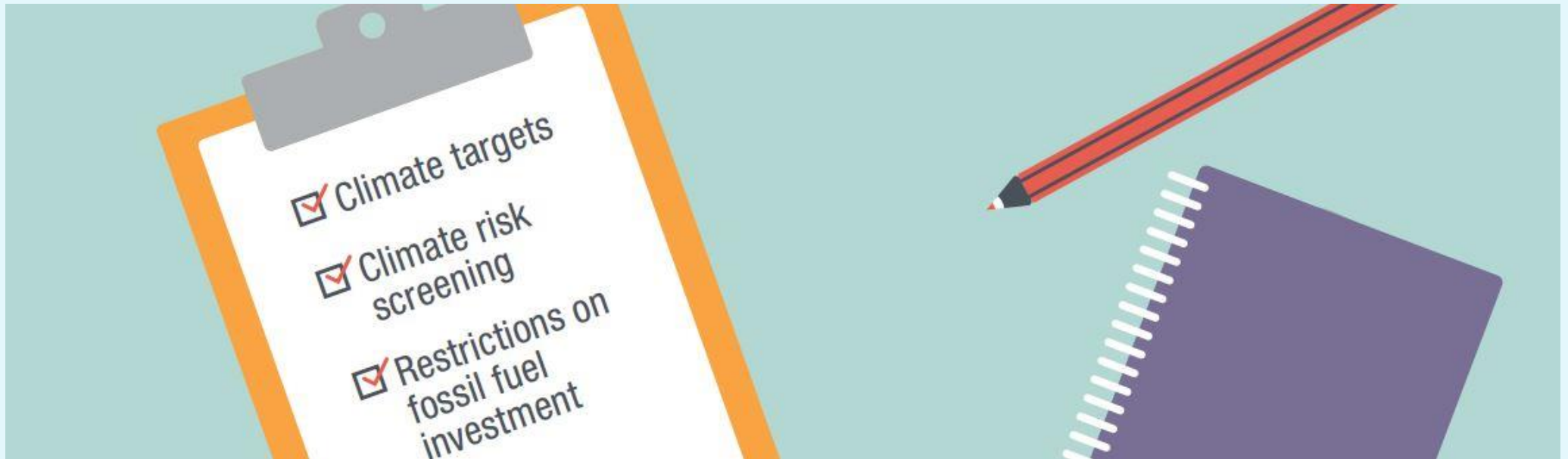
개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국내 공공 재원을 점차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예산의 17% 이상이 기후변화 대응에 지출된다. 국내 정책 및 규제도 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노력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탄소 기술 투자를 줄이고 기후 리스크 관리를 강화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다. 국제적 지원은 이러한 노력의 규모와 범위를 늘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9. 금융기관들, 마침내 저탄소 발전과 기후리스크 관리 향상

2014년 다자개발은행(MDB)는 개도국 및 신흥국의 기후행동을 위해 280억 달러 이상을 약속했으며, 국제개발금융클럽(IDFC)은 2013년 980억 달러를 약속한 바 있다.

MDB는 이제 온실가스배출을 자신의 투자와 연계하여 측정하기로 하면서, 청정 에너지 투자 증가 목표를 채택하고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하여 투자를 심사하고 적음 조치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 MDB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첫 발이라고 할 수 있다. 개도국 금융기관 등 개발인프라 재원 운용 주체 또한 새로운 톨과 메트릭스를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개발에 투자하고 기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10. 기후재원 증가는 빈국에 대한 원조 증가

기후변화와 개발 어젠다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회복력을 증가시키는 투자는 발전 편익으로 이어진다. 모든 원조는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이 보고한 대부분의 기후 재원은 ODA 예산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는 빈국에 대한 원조 전용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총 ODA(공적개발원조) 중 실제로 기후재원이 차지한 비중은 16% 밖에 되지 않는다. 기후재원뿐 만 아니라 최빈국에 대한 개발원조 비율을 모두 늘려야 한다.

